

“전주 시내버스노선, 시민위주 조정을”

이명연 의원 5분발언 “34개 마을 제외…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지·간선제 도입해야”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이 어설피게 확장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아쉽게도 6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에 34개 마을은 제외됐다”며 전주시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그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35개 농촌마을 중 한 곳만 시

내버스 노선에 포함되고, 34개 마을은 여전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은 전주시 교통정책에서 소외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

이 의원은 “35개 농촌마을의 경우 대부분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통 공간 및 회차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승합차 규모로 운행이 가능한 마을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버스 이용수요 감소와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으로 대형버스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에 맞춰 소규모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완주 시내버스 통합

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버스노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난관에 빠진 이유가 일부 완주 군민들이 환승 불편을 사유로 지·간선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선 증편과 단일 노선 유지 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버스 운행률을 높이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이 완주군의 반대로 지연된다면 완주군과 버스 운영 체계를 분리, 전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더민주, 우병우 사퇴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사퇴 압박 공세를 폈다.

추미에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을 열고 “수석 하나 지키려 국민을 버리는 청와대는 난장판 됐고 당정청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기 방어에 급급해서 이런 사람 하나 걸러내지 못하는 정말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야당의원이 자료 뒤져서 발견해내는 이런 정도의 부적격사유를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걸러내지 못하느냐. 우수석을 보호하느라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와 우수석을 비난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10월 군 장성 인사를 앞봤는데 우 수석은 이번 장성인사도 검증한다. 우 수석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장병들이 진급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다고 한다”며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이어 이 나라 국가안보를 책임질 장성들마저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철 최고위원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선 결코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모든 정보를 갖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가 우수석을 경질하긴 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측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하는가 하면 검찰에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대통령 뜻 이어갈 수 있도록”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 대표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9일 열린 경남지역 합동연설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점을 회고하며 “그 때 과오를 통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 추미에에게 기회 한번 꼭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반기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 도의회 운영위, 12월 말까지 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자용)는 1일부터 하반기 도민참여조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는 올해를 도민들이 참여하는 자치입법의 원년의 해로 삼았다.

이에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전북의 미래설계를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조례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도민들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자치법규로 입법화함으로써 도민

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바뀌어 나간다는 방안이다.

이번 하반기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다.

접수된 의결은 전라북도의회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차 심사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전라북도도의회 의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이번 공모전 참여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도의회 송자용 운영위원장(완주1)은 “상반기 공모전에 21건이 접수돼 현재 선정심사 중에 있다”면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우병우 보호작전에 여러배역 등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용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흔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다”며 “굳이 일부 언론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록권적 행동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내가 볼 때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록권 세력이라고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는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공격하지 못하니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민약 사정 기관에 의해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썼다면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평정한 문제”라며 “몇몇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문란해지는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리베이트 요구, 허위계약서 작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검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가 대신 내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과 업체들이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

억여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횡령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혐의 중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만 빠졌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적 자체가 없다.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이 지시해 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관련 TF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왕 전 사무부총장 측 역시 박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TF팀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명시해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선관위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홍보TF는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도 교수, 카피라이터 김도씨가 중심이 됐다.

“선거홍보 TF가 존재한 적 없다” “리베이트 아닌 정당한 용역대가”

변호인은 “지난 3월에 김 교수, 김 의원, 김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TF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단체방은 3명이 국민의당 선거홍보기획팀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 연락, 토론 등을 위해서 만든 임의적 공간이다. 그것이 TF팀 실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3명이 추진한 업무는 총선 관련 광고·홍보기획을 용역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선거전략을 짜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오고 간 자금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이다. 따라서 보전청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검과 세미클론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로 돈을 보낸 건 실제 하청 업무계약에 따른 행위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소속 당에 실례를 끼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소 사실만 보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TF라는 용어를 사용해 (피고인들)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조원 추경 처리’ 결국 8월 넘길 듯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결국 8월을 넘게 됐다. 정부가 내달 2일 201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 추경과 본예산이 동시에 계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가량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예산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게 최소한 6~7시간은 걸린다”며 “역산해 보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후 5시까지의 합의가 꽤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더민주가 내건 누리과정과 개성공단 지원 예산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묻자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 아니다”며 “국가재정법에 다른 재정원칙은 사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원내대표들이 노력을 하겠다”며 “잘 조정돼 내일이라도 개원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운선 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속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증액 단독 의결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조운선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개를 강행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회의 거부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속개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속개 직후 모두발언에서 “오전에도 새누리당에서 55분이나 지체하며 회의장에 지각 참석했다”며 “참석해서도 정상적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오전 회의를 마무르며 당부 드렸지만 오후 회의에서도 50분 가까이 새누리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어느 국민 한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야당 단독’ 속개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지난 29일 교문위에서 6,000억원의 예산 의결이라고 하는 위법적인 절차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적격한 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간사는 “3당 간사가 서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위원장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간사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새누리당의 청문회 불참이 마치 우리가 의도적, 일방적으로 이러는 것처럼 모두발언을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위원장은 그간 진행상 정부 측의 의견 절차를 무시했고 그것이 위법으로 판명났는데도 나름의 유권해석으로 내리고 사퇴를 거부했다”며 “사퇴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회의를 속개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는 분명 청문회 불참이 아니라 위원장의 부적격 회의 진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의장 교체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참여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렸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늦게 입장했고, 입장한 후에도 유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동반한 공방만 주고 받았다. /뉴시스

문재인 “박근혜정부는 숨막히는 불통정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를 겨냥, “통하지 않고 꼭 막아서 숨막히는 불통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낸 윤태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간한 책을 소개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정치가 없다. 그들에게 책 읽기 과제로 드리고 싶은 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내일이 고희”라며 “마침 이 때 생신 선물처럼 그의 영원한 대변인 윤태재가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시절에서는 파전, 신김치에 딱딱한 한 잔을 곁들인 소박한 동네잔치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바 있다.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토대로 한 말하기 노하우와 노 전 대통령의 일화 등이 담겨 있다.

문 전 대표는 책에 대해 “정치는 말이다”라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소용돌이였다”며 “말 때문에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의 말의 진면목, 재미있고 서민적이고 감동 있는 그의 말들을, 그의 숨결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